

지방청년들의 취업, 일자리 양적확충과 질적인 문제가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미래융합대학 융합인재개발학부/202312861/김미영

개요

1. 서론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를 했다.

2. 지방청년들의 취업 어려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기업의 수가 부족하고 취업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기업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지방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3.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방안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취업전문가가 연계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취업 네트워크를 만들어 청년들이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4. 결론

지방청년들의 취업, 일자리 양적확충과 질적인 문제가 같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

1.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무엇보다 과도한 경쟁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20% 남짓 소수에게만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 아이들은 입시지옥을 견뎌야 한다. 부모는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 자녀를 선택한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난 80%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속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개인적 성장의 기회가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정홍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격차는 지난 10월 167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도 두배 이상 차이가 나며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남녀 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174만원으로 OECD 회원국 중 27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군사적으로만 분단국가가 아닌 '노동 분단국가'이기도 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산업정책은 대기업 지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용정책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2023.12.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2.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어떤 곳 일까.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이 덜 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며, 미래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경제적인 조건을 가진 근무환경을 가진 일자리다. 기쁨을 갖고 일하며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 이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 이에 따라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 단념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으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는 낮은 편이었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각종 채용행사와 취업성공패키지 등 실제로 취업으로까지 연결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기업의 수가 부족하고 취업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기업의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박람회, 설명회 등 취업의 기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지가 오래라 지방청년들과 수도권과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방청년들은 취업을 하기위해 졸업유예로 한달리 걸쳐놓고 혼자 백날 도서관에 틀어박혀 자소서 쓰려고 하면 쓸게 없다. 요새 자소서 트렌드가 꼭 멋드러진 일이 아니더라도 알바, 인턴, 단기계약직 등으로 재직하면서 조직에서 활동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묻는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 청년들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사기업 같은 직장을 찾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가야되고 보다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은 매년 최고의 경쟁률 속에서도 몇 년씩 매달리게 되는 지방청년들의 유일한 취업 탈출구이자 목표가 되어버렸다.

3.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겪는 어려움은 경력 부족,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 구인·구직 공고를 찾는 것,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지역을 옮겨야 하는 것, 취업에 대한 지식 부족 등 여러가지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취업 전 경험, 스펙을 쌓을 수 있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조직을 전국적으로 더 많이 확산시켜야 한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취업전문가가 연계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취업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전문가 심리상담 물론 본인 전공분야에 대한 취업상담, 취업을 위한 교육연결, 기술 및 능력강화, 취업 전후 의식주 문제 해결 등 청년들이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준비하는 지방청년들에게 공동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청년들 본인 지원하는 분야에 특화된 회사를 지방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교육 및 다양한 경험을 시킴으로서 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진로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이나 지원정책을 통해 지방에서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지방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지역내 장소, 인적, 인프라 자원을 활용하여 그 회사 주변으로 주거문제를 확실히 지원해주는 등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정의 지원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중소기업 복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서 대기업등과의 격차를 다양한 관점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경기침체와 고용불황으로 매달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고용한파는 수많은 지방청년들에게 스스로 그 답을 찾게 했고 정부 역시도 알아서 취업의 길을 찾으라 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잠재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생활고나 빠른 취업만을 위해서 진로를 생각하게 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인구가 줄고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감소,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 전 분야가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지방은 청년들의 유출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지자체에서의 청년들에 대한 투자는 지방의 존속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 하여 지원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수없이 내어놓고 지자체에서 복붙하여 내어놓은 일회성 청년 대책으로는 청년취업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없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마음놓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양적 확충과 질적인 문제가 같이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